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7. 29.(화) 11:00 < 7. 30.(수) 조간 > 배포 2025. 7. 29.(화)

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

- 기회발전특구 4차 지정, 전북·경남에 약 1.7조원 규모 기업투자 -

-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확대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*를 지정한 이후, 금년 처음으로 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.30.(수) 고시한다고 밝혔다.

*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·재정 지원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

① (전북특별자치도)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.5만평 지정

② (경상남도) 나노융합산업, 이차전지 소재,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·하동군·창녕군에 총 67.1만평 지정

③ (울산광역시)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*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 확대(0.6만평→1.1만평)

* 6.20일, SK-AWS(아마존웹서비스)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 체결

이번에 지정된 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.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,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.

기회발전특구는 시·도별 면적상한(광역시: 150만평, 도:200만평)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·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. 다만,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,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.

또한, 기회발전특구는 “수시 신청·지정”방식으로 운영중인 바,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봉석 (044-203-4420)
	지역경제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최선혜 (044-203-4405)
	지방시대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길준 (044-251-3126)
	과학산업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창연 (044-251-31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제4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

지역(입지)		분야	면적(만평)	지정여부
전북	남원(남원일반산업단지)	라이프케어	15.5	지정
경남	밀양(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)	나노융합산업	22.1	지정
	하동(대송산업단지)	이차전지소재 등	26.3	지정
	창녕(대합일반산업단지, 영남일반산업단지)	모빌리티 부품 등	18.7	지정
울산	남구(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)	변경된 투자계획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 : 0.6만평 → 1.1만평		변경

참고 2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(`25.7월 기준)



4차 경남(밀양, 하동, 창녕) / 전북(남원)